

## EU 2010년까지 온실가스 15% 감축 추진

유럽연합(EU)은 3월 3일 오는 2010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지난 90년 수준보다 15% 감축하기로 했다.

마그리트 드 비르 네덜란드 환경장관은 EU 환경이사회를 마친 뒤 "EU 전체적으로(온실가스 방출을) 15%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회의를 앞두고 온실가스 방출문제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공동입장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온실가스의 방출제한 노력과 관련, 당초 오는 2005년까지 가스배출을 10% 감축하고 이어 2010년까지 15% 삭감하는 한편 탄산가스의 경우 2005년 8%, 2010년까지는 12% 줄일 것을 제안했었다.

환경이사회는 이와 함께 회원국들로 부터 특히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에너지 생산양식을 기초로 한 국별 온실가스 방출 조정목표도 당초 제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의 주요 화석연료 사용국인 독일과 영국의 경우 가스 방출 삭감목표가 각각 30, 20%에서 25, 10%로 낮아졌다.

또 당초 5% 삭감토록 했던 프랑스는 전기 발전의 대부분이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핵연료에서 오는 점을 감안, 감축목표를 없앴으며 이탈리아는 7%만 삭감하도록 했다.

그외 아일랜드와 핀란드가 15% 더 방출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비롯 그리스·스웨덴·스페인·포르투갈 등 6개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5~40% 더 방출할 수 있게 했다.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릴 세계 기후변화문제 정상회의에서는 과거 리우 데자네이루와 베를린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 방출제한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아·태지역 환경오염 위협 급속 증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과거 유럽과 북미같은 선진국에서만 문제시됐던 산성비와 광범위한 대기오염이 급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관리들이 최근 밝혔다.

유엔환경계획이 작성한 '세계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에서는 또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지역 오존층이 예상보다 빨리 손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이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각한 시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존층 파괴물질의 거래 금지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지역의 에너지 수요는 90년에서 오는 2010년 사이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탄화수소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명백하게 지속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연림은 지난 10년간 8%나 줄어들었으며 아시아지역 삼림자원은 앞으로 40년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유엔관리들은 지적했다.

## 지구온난화 대책마련 시급 경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3월 6일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단체인 IEA는 이날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 후속회담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또한 에너지를 슬기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EA는 에너지 효율 극대화과 CO<sub>2</sub> 등 환경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국의 에너지 상황과 개발 필요에 부합하는 환경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개발도상국들에 촉구했다.

한편 노르웨이는 이날 2010년까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방출량을 지난 90년의 방출량에 비해 10%에서 15%까지 줄이자는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92년 리우 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의 구체적 이산화탄소 방출량 억제

목표치가 설정될 예정이다.

## “전세계 물 공급 위기에 직면”

각국 정부의 정책적 결함, 과도한 지하수 사용, 수질 오염 등이 전세계 물공급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3월 9일 경고했다.

IFPRI는 물 공급과 식량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물 부족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데 가장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증하는 물 수요를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물 사용량이 유럽은 5백%, 아프리카 3백%, 미주지역이 1백%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 올려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4백만ha의 농경지가 지하수로 관개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수의 대수층이 물을 다시 채우기도 전에 지하수가 퍼올려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하수 수위가 연간 1m씩 낮아지고 있으며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30m나 낮아진 곳도 있다고 한다.

공해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도 물 부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10억 인구가 음용수로 부적절한 물을 먹고 있으며 17억명이 충분한 위생시설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마크 로

즈그랜트 연구원은 물 공급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발되는 낭비적 관행이 물 부족 위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로즈그랜트는 “공공 서비스에 의해 물 사용자가 아주 적은 비용을 들이거나 거의 공짜로 물을 공급 받는 상황에서 그가 물 관리자

용수를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용수를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 산업용수와 도시 지역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공해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도 물 부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10억 인구가 음용수로 부적절한 물을 먹고 있으며 17억명이 충분한 위생시설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든 혹은 농민이든 아니면 도시민이든 누구도 물을 아끼려는 유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각국 정부에 대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물 공급 권한을 분산시키고 보조금을 줄일뿐 아니라 물공급 관리 업무를 민간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다음 세기에 정부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식량 생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농업

로즈그랜트는 마지막으로 최근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비전통적인 수자원’에 그리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의 담수화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농업 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강우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적다”고 덧붙였다.